

#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58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10.
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## 1. 개정이유

「지방공기업법」의 개정으로 근거가 없어진 “공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사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”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정당한 이유 없이 「지방공기업법」 제82조에 따라 공기업 검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규정을 삭제함(안 제32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신구조문대비표: 붙임

나. 관계법령: 붙임

다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### 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19. 9. 10. ~ 2019. 9. 30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### 2) 규제심사: 규제심사대상 없음

### 3) 부패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

### 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사항 없음

### 5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(미첨부사유서 붙임)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##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2조(과태료) 시장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82조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79조를 적용하고,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따른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

# 관계법령

## [지방자치법]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 [지방공기업법]

제73조(감독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·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·감독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,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> [전문개정 2015. 12. 15.]

제82조(과태료)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3조제2항(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검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5. 12. 15.>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 <개정 2015. 12. 15., 2017. 7. 26.> [전문개정 2011. 8. 4.]

### □ 지방공기업법 제82조제2항 개정 연혁

제82조(과태료)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중 안전행정부장관의 검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부과·징수하고, **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·징수한다.** [시행 2013. 3. 23] [법률 제11690호, 2013. 3. 23, 타법개정]

⇒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[시행 2015. 12. 15] [법률 제13568호, 2015. 12. 15, 일부개정]

#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재정수반요인: 해당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

## 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안은 「지방공기업법」의 개정으로 근거가 없어진 “공기업 검사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”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예상되는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

## 4. 작성자: 교통국 철도시설과장 허주영